靑 "김여정 담화, 몰상식…현재론 판문점선언 비준 무리"

NSC 상임위 화상회의…"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에 경고"
"대북특사 제안 공개, 전례없는 비상식적 행위" 유감 표명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성명 20주년 기념 메시지를 신랄하게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관해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사리분별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써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전 8시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화상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 제1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한다.

윤 수석은 김 제1부부장이 문제삼은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에 대해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후퇴시켜서는 안되며, 남과 북이 직면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러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수석은 북측이 남측의 특사파견 제안과 이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우리측이 현상황 타개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전례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대북 특사 파견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전혀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전단 살포 자제 당부는 여전히 유효한가'란 질문에 "9·19 군사합의나 4·27 선언이 무효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는 합의 위반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 언급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에 "특별히 소개해드릴 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관해선 "제 판단으론 현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은 좀 무리가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다만 "당과 협의했거나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제 판단이 그렇다"며 "전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들이 잠시 있었고, 그런 논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현 시점에서 어려운 것 아닐까 말씀드린 것이다. 그렇게 결정하려면 별도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제1부부장의 지난 4일 담화 이후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5일 남북합의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특사 거절은 미리 언질을 받았는지, 공개적 메시지로 알게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특사는 그 자체로 비공개"라며 "저희는 특별히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특사 파견이 무산됐는데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구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계속 논의해봐야 한다"며 "어제(16일)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파악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측의 담화를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것 외에 구체적 행동이 가능한가'란 질문에는 "가능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특사 파견 가능성에 관해선 "미국과는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니 않냐"면서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했다.

김회재 국회의원 "경도 개발, 차질없는 진행 최선"

관광단지 개발 착공식 참석
1만4,969명 고용 효과
1조8천억원 생산 효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최근 여수시 경도 개발 부지에서 열린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서 김 의원은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세기이다. 문화관광자원이 국력을 만들어내고, 관광역량이 나라의 경제역량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그런 의미에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착공식은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이어, "여수는 이미 연간 1,300만 명이 다녀가는 국내 최고의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발돋움했는데, 경도 개발은 여수가 한 차원 더 도약하면서 세계적인 해양관광 허브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진입도로(연륙교) 개설사업 예산 등을 챙겨 경도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도(2.14㎢·64만여 평) 일원에 조성되는 경도 해양관광단지에는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호텔, 콘도,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연간 385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 1만 4,969명의 고용효과, 1조 8,000억 원 이상 생산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국민 52%, 民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잘한 일'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잘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국회법 준수, 국회 역할 수행 등을 위해 잘한 일이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2.4%, '합의 관행 무시, 여당 견제 수단 박탈 등 잘못한 일이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37.5%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0.1%였다.

연령대별로 '잘한 일'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40대에서 68.6%로 가장 많았다.반면, 30대(잘한 일 50.2% vs 잘못한 일 42.2%)와 60대(44.8% vs. 49.9%)에서는 두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잘한 일'이라고 한 응답이 70.6%로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형석 대표발의 할 '5·18특별법 개정안' 초안 내용
정부 확인 '5·18 진실'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정부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발표·조사 등을 통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5·18의 진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공청회를 열고 입법을 추진 중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은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 초안에는 제1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라는 문구를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라는 내용을 담아 5·18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리를 명시했다. 또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강한 처벌을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이나 전시물·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을 통해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신문·잡지·방송 그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마저도 정부(5·18진상조사위 포함)의 발표·조사 등을 통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18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인 이형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철희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연구와 학설, 보도 등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처벌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상충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처벌을 하지 않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